

신정부에 바라는 양계분야 정책 제안

국제 곡물가격의 고공행진 등 축산업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신정부가 지난 2월 출범하였다. 한·미 FTA 국회비준은 물론 한·EU FTA 협상 전개 등이 경기 침체와 맞물려 앞으로의 양계산업은 가시밭길이 예상되고 있다. 신정부 출범과 함께 본회에서는 양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8개 사안에 대해 양계분야 정책을 정부에 건의한 내용을 요약·게재한 것이다. -편집자주-

1. 육용원종계 쿼터제 의무도입 시행 및 계열화 물량 축소

1) 현황 및 배경

고유가, 사료비 상승, 한·미 FTA 등의 다자간 자유 무역협정 및 최근 과잉입식에 의한 업계의 불황으로 농가경영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폐업농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국내 육용원종계와 종계사육의 적정 수수는 각각 약 132천수(D-line기준)와 5,745천수로 최근 과잉입식으로 인한 업계의 불황이 지속되고 있다.

국내 육용원종계 적정수수는 약 132천수로 추정되며, '06년과 '07년 수입된 물량과 비교해 보면 6.8%, 20.5%의 물량이 초과되어 향후 육계산업의 과잉생산 및 불황이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과잉에 따른 해결방안은 도태 및 실용계 처리 등의 소모적 방안외의 특단 조치가 없는 것이 현 실정이다. 국내 육계산업의 수용능력을 고려치 않은 시장논리의 무분별한 수입은 결국

산업의 존폐마저 위협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정부의 적극성과 업체의 자율성이 병행된 세부방안이 실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 개선방안 및 요구사항

- 원종계 적정쿼터물량 설정 및 유지에 대한 업계의 대승적 합의가 요구됨.
 - 132천수 이내로 쿼터 유지(생산성 10% 하락요인 감안).
 - 종계(PS)자체사용분 및 판매망이 확보된 물량을 감안한 원종계 수입 필요.
- 수급조절(감축)방안에 대한 논의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과 정부의 적극적 개입 요망
- 계열화 업체에서 생산에 필요한 물량을 기준으로 전국단위 종계의 50%이하 물량만 취급토록 정책유도
 - 수평계열화 유도로 농가와 계열업체간의 상생구도 형성

3) 기대효과

쿼터제 의무도입 시행은 생산·공급의 적정량을 유지하고 소모적인 생산비 감축에 효과적일 뿐 아니라 감축된 경영비를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주력할 수 있어 외국산 닭고기와의 차별화·고급화 실현에 구현되어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등의 험난한 파고에도 건전한 육계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2. 배합사료 가격안정화기금 설치

1) 현황 및 배경

배합사료 가격 인상으로 전 양계업계에서 고충을 겪고 있는 가운데 양계산업 존립에 관한 문제까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육계사료의 경우 제조(생산)하는 자체를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배합사료 가격이 40% 이상 상승했으며, 축종 중 양계사료 단가가 가장 비싸게 나타나고 있다.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 국내 양계농가의 도산이 불가피하므로 정부차원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2) 개선방안 및 요구사항

○ 배합사료 안정화기금 설치검토

- 자금을 농가에 직접 지원하기 보다는 원료(옥수수 등) 구매단계에 지원하여 배합사료 가격인상을 억제하는 방안마련

3. 양계의무자조금 추진

1) 현황 및 배경

축산분야의 자조금은 국내에서 양계업이 가장 먼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장 뒤쳐진 진행사항

을 보이고 있다. 이는 양계업계의 문제점도 있으나 정책적인 뒷받침이 다소 부진하여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간과할 수 없다.

《 육 계 》

육계의무자조금은 농협, 대한양계협회, 한국계육협회가 참여하는 공동준비위원회를 2004년 11월 15일 발족하고 대의원 135명을 선출하였다. 이후 제 1차 대의원회 개최('05.12.23)를 시작으로 4회에 걸친 결과 자조금 거출여부 및 거출금(수당금액)을 확정하고 2007년 11월 공동준비위원회 회의결과에 따라 대의원이 선출하는 관리위원 및 감사위촉(안)을 서면결의로 확정하였으나 당연직 관리위원(관계공무원, 소비자단체 등)선출 및 거출금 배정 등의 문제로 보류상태에 있다.

2) 개선방안

○ 관리위원의 조속한 구성 및 자조금 추진

- 정부가 추천하는 당연직 관리위원(관계공무원, 소비자단체 등)의 조속한 위촉
- 각 계열화업체에 대한 정부차원의 제도 및 농가, 계열업체 상호간 이견조율(자조금 거출비율 등 거출문제는 관리위원회에서 논의토록 조치)

《 산란계 》

과거 의무자조금 시행을 위한 거출기관 지정을 위해 배합사료 생산업체 및 병아리 생산업체(부화장)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동 업계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또한 타 분야에서는 자조금법상 거출기관을 도축장으로 일관하고 있으나 산란계의 경우 도계장은 계란 생산을 마친 노계를 처리하는 단계이므로 자조금 부과에 문제점이 도출된 바 있다. 현재 산란계 의무자조금은 거출기관 미확정으로 임의자조금을 시행하고 있는

데 2007년에는 602,261천원(정부보조 포함)을 사용하여 소비홍보 등 사업추진 중에 있다.

3) 개선방안

- 부화장 및 배합사료 생산업체가 자조금 거출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
- 부화장과 배합사료 생산업체에서 자조금 거출이 어려울 경우 최종 생산단계인 계란에서 거출하기 위해 계란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유통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4. 공정한 계란가격 형성을 위한 위원회 구성

1) 현황 및 배경

계란시장은 소규모 농가형태에서 대형생산체제로 전환, 항생제 미사용 등 소비자욕구(위생, 안전성)를 충족하기 위한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농가에서 생산된 계란은 유통상(약 45%), 도매상(약 23%), 산지조합(약 19%), 대형유통업체(약 9%), 기타(약 4%)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계란의 유통구조 특성상 수집상(계란상인)이 가격결정에 편파적으로 관여하고 있으며, 현행 가격결정 구조는 자칫 상거래법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 개선방안

- 공정한 계란가격 형성을 위한 위원회 구성(정부고시)
 - 위원회 구성은 소비자, 관계공무원, 생산자, 유통 등 각 분야 전문가 등 7인 이내로 구성.
- 계란 유통상황 변화에 따라 수시로 위원회 개최, 생산원가 등락에 적극 반영

5. 위생적인 삼계탕용 닭 생산 체계 구축

1) 현황 및 배경

삼계탕은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식품으로 국민들의 보양식은 물론 일본, 홍콩, 대만 등에 수출되어 비빔밥, 불고기 등과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식품으로 발돋움하였다.

이렇게 보급되는 삼계탕용 닭고기의 대부분이 일명 '백세미'로 유통되는데, '백세미'가 비정상적(비위생적)인 상태로 관리가 되고 있으며, AI 및 가금티푸스 등 질병전파의 주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업계에 큰 피해를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폐단을 없애고 위생적인 삼계탕을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백세미'를 근절시키고 대체품목을 개발, 보급시키는 작업이 시급하다 하겠다.

2) 개선방안

- 백세미 대체품종 보급을 위한 연구 및 지원책 강구
 - 국가 차원에서 국내 전통식품인 삼계탕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 국내 소비를 창출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필요
 - 정부(축산과학원)가 지난 1990년 재래닭 육용화사업을 통해 개발한 재래닭 순계(PL) 등을 자원으로 백세미 대체품종 연구, 개발
 - 일반 육계에 사양 및 영양관리 기술을 접목, 경제적이면서 맛과 품질에서 차이가 없는 대체품목 연구, 개발

6. 국내 양계용 백신 생산기술의 육성지원

1) 현황 및 배경

닭 질병발생시 대부분 농가에서 항생제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친환경인증제, 안전성 강화 등으로 항생제



사용이 점점 어려워지는 형편이다. 또한 ND 등 일부 질병은 기존 개발된 백신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새롭게 대두되는 질병(뉴모바이러스) 등에 대한 질병 대책이 미흡한 형편이기 때문에 국내 양계용 백신의 생산기술 육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2) 개선방안

- 항생제를 대체할 수 있는 백신도입 검토 필요
정부주도하에 고품질 국산백신을 개발·보급하고, 국내 사정상 연구에 시간이 소요되거나 당장 백신이 필요할 경우 외국백신을 쉽게 수입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검토
- 새롭게 대두되는 질병에 대한 연구조사를 거쳐 백신 도입 검토 및 대안마련

7. 계분자원화사업 지원

1) 현황 및 배경

양계농가에서 배출되는 분뇨(이하 계분)는 현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3장에 의거 건조·발효과정을 거쳐 퇴비로 자원화 되거나 가축분뇨 관련 영업을 통해 적절히 처리되고 있다. 또한 퇴비로 자원화되는 계분은 화학비료 대비 70~90%의 비료효과를 볼 수 있는 우수한 비료이며, 비료화하는 과정이 타 축종에 비해 수월해 전 세계적으로 계분은 퇴비로 자원화되는 대표적인 가축분뇨이다. 하지만 많은 농가들이 계분처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계분 자원화 사업 지원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

2) 개선방안

- 경작농가와의 유통협의체 기능 확대
현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4장

제 21조에 의거한 경작농가 대상 교육을 확대하여 퇴비 사용을 촉진시켜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이행하고, 경작농가와 유통협의체 기능강화 통해 계분 퇴비 유통 판매망 구축

- 계분 자원화 지원사업 확대

농장자체 계분발효 설비 확충시 정부지원금 현행 최대 20백만원에서 100백만원으로 확대(계분발효 건조 시설비 5만수 규모농장 기준 300백만원 소요)

8. 축사시설 신축에 따른 사전협의체 구축

1) 현황 및 배경

현재 축사시설 신축에 대한 제제가 없는 가운데 축사시설 신규 건축시 각 시군 도시건축과에 신청 및 허가(계사규모 400㎡이상)토록 되어있다. 닭 사육수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양계산물 수급조절이 어려워 시세는 큰 폭의 등락을 보이며 형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정부규제방안은 사실상 전무해 축사시설의 과도한 신축과 이로 인한 양계산물 생산증가에 따른 가격형성의 불안요인이 산재해 있다. 따라서 무분별한 축사시설확대를 제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개선방안

- 축사시설 신축 사전 등록 및 규제방안 마련
 - 축사시설 신축에 따른 지자체 축사시설신축신청 및 허가제에 앞서 사전등록을 통해 사육규모를 사전에 파악, 지역별 쿼터제 수립으로 과도한 축사시설 신축을 제한.
 - 각 지자체에 축사시설 신축에 따른 컨설팅 기구를 설치, 기존 신고제 및 허가제에 그쳤던 축사시설 신축과정을 세분화·강화함으로써 무분별한 축사시설의 증가를 사전에 방지 양계